

<1번 문항>

제시문을 읽어보면, 을국은 갑국에게 '내정 불간섭 원칙'을 내세우며 국가의 최고 의사 결정권인 (가)를 존중해 줄 것을 요구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의 개념은 국가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 중 하나인 "주권"이 됩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국가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는 국민, 영토, 주권입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주권의 특성으로 알맞은 것은 2,3,4,5번에 적혀있는 내용들입니다.

2번은 주권의 '정의' 그 자체로 맞는 말이고,

3번은 국민주권주의가 전제된 하에 맞는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대 원칙 중 하나죠. 그래서 단서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라는 말이 붙어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20번 문제에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4번 또한 주권의 정의 그 자체로 맞는 말입니다. 주권이 전제되지 않으면, 국제 사회에서 독립된 국가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5번에서는 세계화로 인해 주권의 행사에 제약이 있다는 언급 또한 맞습니다. 법과 정치 과목 중 정치 단원 마지막에 나와있는 국제사회의 특성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이상주의적 관점이든, 현실주의적 관점이든 초 국가적 행동 주체들의 등장으로 인해 개별 국가의 의사 결정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UN의 안전보장이 사회의 제제를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반면, 1번에 "일반 사회 집단도 소유하는 것"이라는 설명은, 단지 '권력'이 무엇인지 설명한 것이지, 주권과는 다릅니다.

정답 : 1

<2번 문항>

먼저 문제를 해설하기 전에 '자유'라는 개념에 대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유의 개념은 시대가 지남에 따라서 조금씩 외연이 달라지거나, 더해져왔습니다.

중세 시대까지 자유의 패러다임은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했습니다. 국가가 함부로 자신의 재산에 손을 대지 못하게 하고, 근거 없이 함부로 노동력을 착취하지 못하게 해야한다는 사상이 기저에 깔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그 때 당시의 '자유'라는 것은 "국가가 함부로 개인을 괴롭힐 수 없다."의 프레임 정도로 보시는게 타당합니다.

그러다가 다수의 혁명과 봉기와 투쟁의 형태의 저항들을 거쳐오면서, 국가의 방향을 국민들이 직접 건설해야 한다는 사고가 자리잡게 되었고, 이에 발 맞추어 '국가에의 자유'라는 패러다임이 서게 되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투표'라는 방법을 고르게 되었고, 이 것이 후일에 참정권으로 분류되는 국민의 권리죠.

그러다가 인류에게는 19세기, 20세기와 같은 양적인 성장을 이루었지만, 질적으로 황폐해진 시기가 있었죠. 세계

대전이라든가, 산업화로 인한 소외된 도시 빈민들, 심각한 빈부격차, 아동 노동 등이 예가 되겠습니다. 이런 시대가 계속되다가, 세계대전이 끝났습니다. 이 때 맞춰 영국의 경제학자 베버리지는 가족법, 국민보험법, 국민산업재해법, 아동법 등의 수 많은 법안들을 제안하면서 질적인 면에서의 성장을 강조했습니다. 이 것이 1940년대 중반~후반에 있었던 일이며, 그 때 그가 발표했던 문서가 그 유명한 '베버리지 보고서'이며, 그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아주 파격적인 표현까지 써가면서 국가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그런 기류와 함께 등장한 개념이 바로 '국가에 의한 자유'입니다. 후일에 사회권으로 분류되는 권리가 되겠죠. (단지 복지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쾌적하게 살 권리, 정당한 임금을 받고 살 권리 등, 국가가 힘을 써줘야 확실해 질 수 있는 권리를 아우르는 개념이기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가) 제시문은 "행동에 대한 외적 강제의 부재"라는 말이 있고,

(나) 제시문은 "사회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의 개입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가) 제시문의 자유는 '국가로부터의 자유'가 되겠고,

(나) 제시문의 자유는 '국가에 의한 자유'가 되겠습니다.

ㄱ : (가)는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 위에서 설명했죠?^^

ㄷ : (가)는 (나)에 비해 '자유'의 절대성을 강조한다 라는 말을 해석해보겠습니다. 국가가 어떤 사람을 착취하거나 멋대로 재산권을 건드리는 일련의 행위들을 "하지 않는다". 즉 가만히 내버려 두는 행위는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적용되니까 절대성이 부각되네요. 반면에 (나) 제시문의 자유인 '국가에 의한 자유'는 사람마다 다르게 적용이 되겠죠. 이를테면 다리가 불편한 사람에게 국가 차원에서 이동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방법은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겠죠. 맹인에게 이동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방법은 맹인 안내견 구입에 도움을 준다든가 혹은 보도블럭을 설치할 때 특수 블럭을 설치한다든가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즉, '국가에 의한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가 취할 수 있는 방법들은 국가가 돕고자 하는 대상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ㄷ 보기는 맞는 말입니다.

반면

ㄴ : 이 보기에 나와 있는 '(나)가 모든 구성원에게 동일한 결과를 보장한다'는 말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사회권이 모든 사람들에게 '결과'를 같이 해준다는 말은 아닙니다.

ㄹ : (가)가 소극적 자유, (나)가 적극적 자유가 되겠습니다. (가)는 위에 설명했듯이, 국가가 어떤 사람을 착취하거나 멋대로 재산권을 건드리는 일련의 행위들을 "하지 않는다"는 자유인데, 하지 않음은 소극적이겠죠. 반면 (나)의 자유는 국가가 발 벗고 나서야 하니까 적극적 자유가 되겠습니다.

정답 : 2

<3번 문항>

제시문 해석 : (가)는 상호 호혜성에 입각하고 공동의 행동 원칙을 가지고 있다. 전통적 양자 외교 방식 못지않게 중시되고 있다. 는 말을 통해 (가)가 다자간 외교 방식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문에 명시된 그대로, 행위 주체(국가로 한정)가 셋 이상 등장하는 다자간 외교 방식은 계속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1 : 단기적인 국익 관철을 우선시한다 -> 다수의 국가가 개입하는 경우에는 제로-섬 게임의 관점 보다는 윈-윈 관점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최소한 교과과정에서는)입니다. 게다가 제시문에 "상호 호혜성에 입각" 한다는 언급이 되어있으므로 1번은 타당하지 않은 선지입니다.

2 : 정부보다 비정부 기구가 주체가 된다 -> 국가 간의 외교에 대해 논하는 제시문이므로 2번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3 : 강대국 단독의 일방주의를 강화시킨다 -> 전통적 양자 외교에서 더 두드러지는 특징이라 할 수 있으므로 3

번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4 : 국가 간 상호 의존성을 약화시키고 있다 -> 제시문의 다섯 번째 줄을 읽어보시면 "개별 또는 양국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과제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나와있으므로 상호 의존성을 강화시키고 있다고 보시는게 맞습니다.

반면

5 : 초국가적 문제의 증가로 유용성이 커지고 있다 -> "개별 또는 양국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과제들이 증가하고 있다" 라는 말에서 확장된 외연이라 보시면 5번 선택지도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 : 5

<4번 문항>

국가 기관이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취하는 조치들에 대해 묻고 있는 문항입니다. 특히 이 문제에서는 사법부로 그 대상을 한정했습니다. 법원에서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운용되는 제도적 장치에 대해 논하라는 구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1 : 객관적 증거에 입각하여 재판하는 것 -> 누구나 동의할 만한 서술입니다. 근대 사회로 이행하면서 특히 강조되어온 부분이죠. 즉, 원님식 재판 ("네 죄를 알렸다~") 또는 증언에만 의한 재판 ("증거는 없지만 저 사람이 A를 죽인 사람이에요. 저희가 봤어요") 등을 부정한다는, 어떻게 보면 단순하지만 정말 중요한 선택지입니다.

(1번 보기 번외편) 이 과목이 법과 정치로 통합된 이상, 법 파트에 대해서도 팁으로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객관적 증거'로 보지 않는 것 중에 '자백'이 있습니다. 언제나 자백을 인정해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백만이 유일한 증거일 때" 자백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것이죠. 만약에 자백을 제외한 다른 어떤 증거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한다면, 그 자백도 충분히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관점이죠. 아주 중요합니다.

3 : 재판의 심리와 판결 과정을 공개하는 것 -> 만약에 공개하지 않는다면 '밀실 판결'이 되겠죠?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기 힘들겁니다. 따라서 3번도 맞는 선지입니다.

(3번 보기 번외편) 이 과목이 법과 정치로 통합된 이상, 법 파트에 대해서도 팁으로 한 마디 또 드리겠습니다. 주문(main sentence)은 무조건 공개하는 것이 맞지만, 심리는 특수한 상황에서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본인의 진술이 오가는 내용이 공개된다면, 수치스러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재판장의 승낙 하에 비공개로 갈 수도 있습니다. 꼭 참고하세요!

4 : 하급 법원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상급 법원에서 재판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 삼심제에 대한 설명이죠. 즉, 항소(1심->2심), 상고(2심->3심) 제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삼심제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준다는 논리는 "법관도 사람이라 판단 실수를 할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세 번 까지는 재판을 받게 함으로서 국민의 권익을 지켜준다는 논리입니다.

5 : 형벌이 무거운 범죄에 대한 재판은 단독 판사가 아니라 법원 합의부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것 -> 4번에서의 논리와 비슷한 논리입니다. 법관이 판단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중한 벌을 받을 범 죄는, 분명히 고려해야 할 측면들이 많이 있을텐데, 단독 판사가 판단 실수를 낼 확률이 합의부, 즉 세 명의 판사가 함께 했을 때보다 크다고 보는데 5번의 논리입니다.

반면

2 :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것 ->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은 법원에서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와는 무관합니다.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행위는 말 그대로 침해된, 혹은 침해될 것이 명백한 개인의 권리를 구제해 달라고 헌법의 논리에 비추어 요청을 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2번 보기 번외편) 그런데 주의하셔야 할 게, 법률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것으로 고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법률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 청구는 법률의 타당성과 합목적성을 논하기 위해 존재하는 제도는 맞지만, "법원에서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운용하는 제도적 장치"가 아닙니다. 헌법 소원을 심판하는 주체는 헌법재판소인데, 헌법재판소는 법원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법률 심사형 헌법 소원을 맞다고 판단하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정답 : 2

<5번 문제>

정당의 후보 공천 방식을 묻는 문제입니다. 바로 제시문 분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시문 분석 : A당은 "당원 여부를 떠나 경력 및 대중적 이미지를 기준으로 한다." 라는 말과 "국민이 참여하는 선거인단 경선을 통해" 하는 말과 "여론 조사 경선" 이라는 말을 통해 당선 가능성을 중시하는 후보 공천 방식을 채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B당은 "신청자의 당원으로서의 활동 경력을 중심으로 한다." 라는 말과 "인지도나 지지도가 낮더라도 정당의 목표와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인물인지를 평가한다."라는 말을 통해 당의 가치에 부합하는 정도, 그리고 당에 대한 충성도를 중시하는 후보 공천 방식을 채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ㄴ : A당이 B당보다 후보 신청 자격 기준과 선정 과정이 개방적이다 -> 여론 조사 경선 혹은 국민이 참여하는 선거인단 경선을 통한다는 구절을 통해 추론할 수 있습니다.

ㄹ : B당이 A당보다 후보의 정당에 대한 충성도를 중시한다 -> 신청자의 당원으로서의 활동 경력을 중심으로 한다는 말을 통해 추론할 수 있습니다.

반면

ㄱ : A당이 B당보다 후보의 정당에 대한 이념의 정체성을 중시한다 -> 반대로 서술되었네요. B당이 A당보다 후보의 정당에 대한 이념의 정체성을 중시하죠.

ㄷ : B당이 A당보다 후보의 정당에 대한 충성도를 중시한다 -> 이 또한 반대로 서술되었습니다. A당이 B당보다 후보의 정당에 대한 충성도를 중시한다고 봐야됩니다.

정답 : 3

<6번 문항>

국제 연합(UN)의 구성에 대해 알고있느냐를 묻는 문제입니다. 비 전공자 혹은 고등학생 수준에서 알아야 할 내용들에 대해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 국제 연합의 총회(General Assembly)의 역할과 안전보장이사회, 즉 안보리의 역할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하며, 유엔 산하 기구가 무엇인지, 그리고 역할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예를들어, 세계은행은 유엔 산하 기구인지, 유니세프는 유엔 산하 기구인지 누군가가 묻는다면 정확히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유사시에만 활동을 하는 기구가 무엇인지와, 강제력을 가지는 기구가 무엇인지 또한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1. 최고 의결기관이라는 표현은 총회를 표현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1번 번외)

안전보장이사회의 비상임 이사국은 (현재는) 2년에 한 번씩 10개 국가가 지역 균형 할당 원칙에 의해 선출이 됩니다. 15개의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은 특수한 안전에 대해 의견을 표현함으로써 국제 평화와 안보에 힘을 쏟니다. 의결을 위한 정족수는 3/5이며(9개 국가), 그 중 상임이사국의 반대가 한 표도 없어야 의결이 됩니다.

2. ㄴ의 총회는 한 국가가 한 표를 가집니다. 국가별 재정 분담액에 따른 차등적 투표권을 부여하는 기구는 ㄱ의 안전보장이사회입니다.

(2번 번외)

상대적으로 후진국이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초 강대국의 권한과 후진국의 권한이 동등한 곳이 총회여서입니다. 이런 점에서 총회를 표현할 때 "이상주의적 관점을 벗볼 수 있다"는 진술은 맞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4. 평화 유지를 권고하거나 경제적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곳은 ㄱ의 안전보장이사회입니다.

5. UNESCO는 ㄹ에 포함이 되는게 맞지만, APEC은 유엔 산하기구가 아닙니다.

반면

3. ㄷ의 국제 사법 재판소가 원칙적으로 당사국 쌍방의 합의에 따른 청구로 재판을 한다는 말은 맞는 진술입니다.

(3번 번외)

3번 보기의 논리에 따라 현안의 이슈를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일본이 아무리 국제 사법 재판소에 독도 문제를 넘기자고 주장해도 다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다름아닌 "쌍방 합의에 따른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논리로 우리도 간도 문제를 국제 사법 재판소에 넘기지 못했던거죠.

그와는 달리, 국제 형사 재판소는 합의와 상관 없이 전쟁 범죄자 등의 국제적 규모의 범죄자를 재판에 넘길 수 있습니다. 이런 행위들을 강제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은 PKO, 즉 평화유지군이죠.

정답 : 3

<7번 문항>

바로 지문 해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윗 글은 언론이 대중에게 다가갈 때, 광고주인 기업으로부터 오는 상업적 이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보도 내용이 언론의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글의 필자는 마지막 줄에서 "언론사 소유권자는 기사 선정이나 해설의 권한을 언론사 구성원에게 위임해야 한다." 라는 말을 통해 '편집권 독립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답 피하기)

2 : 언론의 신속성을 논하고자 하는 글이 아닙니다.

3 : 개인의 사생활은 지문에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4 : 경제적인 문제를 논했지, 국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논하지 않았습니다.

5 : 매력적인 오답입니다. 앞에 나온 "상업적 저널리즘"이라는 표현은 제시문의 소재를 집약해주는 단어이기 때 문입니다. 하지만 언론사의 개인 소유를 제한하자는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으므로 답이 될 수 없습니다.

(5번 번외)

혹시나 개인의 소유를 제한하면 언론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을것이란 생각을 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소유가 어 디 있느냐와 공정성은 고등학교 법과 정치 수준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하기 힘듭니다.

정답 : 1

<8번 문항>

헌법 개정의 과정과 법안 제정의 과정을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거의 매 해 단골 수능 출제 소재니 꼭 익혀두시 기 바랍니다. 단지 순서만 외울 것이 아니라 각 과정들의 최대 소요 기간도 정확히 암기하셔야 합니다.

1. ㄱ은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을 공고한 이후의 일이며, 국회에 투표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이 때 헌법 개정안은 국회 재적 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1번 번외)

"재적"하고 "출석" 잘 구분해주세요. 눈속임 당하는 분들이 매년 계시더라고요 ㅠㅠ

3.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Veto)가 이루어 진 후에 재의결 과정으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처음에 법률안을 제출할 때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동의하면 법률안이 통과되지만,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이 행사된 이후에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4. 헌법 개정안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공고, 공포를 모두 수행해야 합니다.

5. 대통령은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법률안의 제출은 국회의원 10인 이상의 찬성만으 로도 가능합니다.

(5번 번외)

일반 법률안의 제출을 행정부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제출한 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비 율과, 행정부의 그것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비율을 비교해보면, 후자가 훨씬 높은 비율을 띵니다. 이는 행정부 비대화 현상의 단편적인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2. ㄴ은 상임위를 가리키는데, 직권상정은 법률안이 국회의장에게 제출되자마자 국회의장이 행사하는 권한이지,

상임위에서 폐지된 법안에 대한 권한이 아닙니다.

(2번 번외) - '정치' 과목이다보니 예시를 들면서 설명하려고 해도 정치적 현안과 관련된게 너무 많아서.. 해설을 작성하는 입장에서 저는 철저히 정치적으로 중립입니다. 사실만 적었으니 오해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미 FTA가 지나긴 진통을 겪으면서 상임위에서 계속 머물다가 직권상정을 통해 본회의로 넘어가서 의결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직권상정에 대한 비판이 거세졌고, 현재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없게 법이 대폭 개정되었습니다. 단지 이 문제는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다 보니 그게 이슈화 되기 전이라 위 내용에 구애를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고, 현재 개정된 법에서도 여전히 상임위에서 폐기된 법안에 직권상정을 쓸 수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정답 : 2

<9번 문항>

이 소재 또한 단골 소재입니다. 정치 사상이라는 것이 결국은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나'에서 파생된 것이기 때문에, 정치 과목에서도 매년 이 문제는 출제를 하고 있고, 홉스, 로크, 루소의 사상은 정확히 해석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말이지만, 팁으로 하나만 드리자면, 사회계약설 문제가 나올 때는 지문을 다 읽지 마시고 눈으로 스캔 하다가 매 시험마다 반복되는 구절만 찾아서 밑줄을 긋고 가시기만 해도 됩니다. 딱 홉스, 로크, 루소 중에 두 명만 비교하는 경우가 문제의 90% 이상이니 이렇게 하셔도 무방합니다. 시간 절약하셔서 선거구 계산 문제에다가 쓰셔야 됩니다.

물론 신의설, 씨족설 등 아주 가끔 가다가 다루어지는 사회계약설도 공부를 하심이 맞지만, 일반적인 경우들에 대해만 조언을 드린겁니다.

(가) 제시문은 "끝없이 서로 투쟁" 이라는 말과 "죽음의 공포" 라는 말만 보고서도 바로 홉스의 사상이라고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나) 제시문은 "일반 의지"라는 말을 통해 루소의 사상이라고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1. 홉스의 계약은 전부양도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레비아탄(일부 교과서에는 리 바이어던이라고 나옵니다)이라는 강력한 괴물(군주의 은유적인 표현으로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에게 개인의 권리를 양도하고 무질서한,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를 멈춘다는 주장을 했기에, 자연 상태에서 개인이 가졌던 권리를 확대한다고 보심은 옳지 않습니다.

2. 루소는 직접민주주의를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따라서 개인들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 의지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함은 틀린 설명입니다.

3. (가)에서 주권이 군주에게 위임된다는 설명은 타당하나, (나)에서 주권이 국가에 양도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루소의 사상은 주권재민(主權在民)으로 보심이 옳습니다.

4. (가)에서는 군주주권론을 강조하기 때문에 권력 분립에 대한 주장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반면

5. 국가와 개인간의 계약의 동기를 (가)에서는 개인의 자기 보존으로 보는 반면 (나)에서는 공동선의 추구로 보는 것은 타당합니다.

정답 : 5

<10번 문항>

기본권에 관련한 문제입니다. 기본권에 대한 개념공부를 하실 때는 oo권, oo권, oo권 하면서 마구잡이식으로 공부를 하시는 것은 추천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기본권에 대한 공부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기본권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그것의 변화를 통시적으로 보시면서 사상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정립이 되었는지 과정을 보시는 것이 암기도 더 쉽고, 초 고난도 문제에 대비가 됩니다.

아주 간략히만 방향을 잡아드리자면, 행복 추구권이 맨 처음에 와야합니다. 행복 추구권에 대한 이해가 끝나셨으면, 그 뒤에 '자유'라는 가치에 대한 공부를 하시면서, '자유'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2번 문항 해설에 "자유"라는 개념의 변천 과정을 스토리 텔링 형식으로 적어드렸으니 참고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평등'이라는 가치에 대한 해석을 배우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에서 권리가 어떻게 규정되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본문 해설로 들어가면, (가)는 법원이 불구속 기소된 사람에게 "피고인에 대한 검거 절차 확인서가 없는 점에 비춰볼 때 피해자에게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면서 무죄를 선고한 내용을 수록했습니다. 이를 통해 (가)의 권리는 자유권, 좁게는 신체의 자유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나)는 "특별법의 철회를 요구 하는 문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하는 것을 봐서, (나)의 권리는 청구권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한 가지만 팁을 더 드리자면, 앞에 나와있는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토지가 국가로 수용되었다." 는 말은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어떤 권리를 행사 했느냐에서는 "특별법의 철회를 요구 하는 문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는 말만이 중요합니다.

ㄴ. 청구권은 다른 권리들과 달리 권리 자체가 목적이 아닌, 하나의 수단입니다. 예컨대 자유권이라고 하면 '자유'라는 그 자체를 중시하고, 그 것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겠지만, 청구권은 다른 자유권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합니다. 이 지문에서도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토지가 국가로 수용되었기에, 본인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넓은 의미에서 국가로부터의 자유) 청구권을 행사한거죠.

ㄷ. 청구권은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ㄴ에서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입니다.

반면

ㄱ. 자유권은 포괄적 권리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석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쉬운 예를 들자면, 지금 이 글을 읽으면서 피곤을 느끼시는 여러분은 하품을 할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 권리가 굳이 법에 써있지 않더라도 여러분은 하품을 해도 되고, 법에 전혀 위배가 되지 않습니다. 극단적으로 단순한 예를 들었지만, 조금만

생각해보시면, 자유권이 '열거되어야 인정받는 권리'라는 말은 틀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ㄱ 번외)

열거되어야 인정되는 개별적 권리의 대표적인 예에는 사회권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국가의 지원(연금 등)을 받는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법에 쓰이지 않은 내용에 관한 도움을 받기는 불가능합니다. 열거되어있는 내용만 엄밀하게 적용해서 권리를 인정해주는 대표적인 예지요.

ㄹ. (가)는 가장 소극적 권리입니다. 따라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요구한다는 설명은 부적절합니다. 또한 (나)는 수단적 권리이지 본질적 권리가 아닙니다.

정답 : 3

11~12번 세트 문항>

선거 제도를 묻는 문제입니다.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의 특징을 정확히 알아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출제 빈도가 낮지만 한 번 출제하면 오답률이 높은, 그 전에 본 적 없는 선거제도를 해석해내는 능력을 기르는 것도 법과 정치 과목 1등급, 그리고 만점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그렇다고 기본 틀에서 벗어난 선거 제도들을 굳이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이른테면 석패율 제도라든가, 독일 의회 선거제도를 직접 세세히 암기할 필요는 없다는 말입니다). 단지 그것을 정확히 해석해낼 수 있는 Frame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문제 해설로 들어가겠습니다. 갑국 의회 선출 방식이 X제도에서 Y제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X제도가 무엇인지는 첫 번째 제시문 두 번째 줄에 직접적으로 명시된 "상대 다수 대표제"라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Y제도는 다섯 번째 줄에 명시된 "한 선거구에서 2인 이상의 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이라는 말을 통해서 소수대표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시문을 보면, 의원 수는 같고, 선거구의 통합 방식은 동-서 혹은 남-북임을 알 수 있습니다.

<11번 문항>

Y제도의 일반적인 특징을 묻고있습니다. 즉 중,대 선거구제(소수 대표제)의 특성을 묻고 있습니다.

1. 사표가 더 많이 발생함 -> 사표는 소선거구제로 시행했을 때 더 많이 발생합니다. 부연하자면, 전체 선거구 스케일로 봤을 때 소선거구제에서 비교적 사표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어쨌건 중,대 선거구제의 특징이 아닙니다.
2. 후보 개인의 선거 운동 비용의 감축 -> 이 또한 소선거구제의 특징으로 보심이 바람직합니다. 단 한 명만이 당선되는 치열한 경쟁이고, 유권자 개개인에 대한 소통이 비교적 원활할 것이 명백하므로 소선거구제에서 더 두드러지는 특징입니다.
3. 군소 정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 하락 -> 중,대 선거구제에서는 군소 정당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정 정당에 대한 선호가 두드러지는 지역에서는, 그 정당에서 나온 후보자가 한 명 당선된다 쳐도, 나머지 한 자리가 있고, 그 자리를 군소 정당 후보가 차지할 가능성이 소선거구제보다는 높습니다.
5. 지연, 학연 등 연고주의에 의한 당선 가능성의 상승 -> 선거구 자체가 작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당장 연

고주의로 승리하기 쉬운 선거는, 그 선거구가 작아야함이 당연하겠죠.

반면

4. 정당 득표율과 의석을 간의 비례성이 높아진다. -> 아쉽게 조그만 선거구마다 2등 정당이 지기만 하면 심각하게 과소대표되겠죠. 그렇지만 2등, 경우에 따라서는 3등까지 존중해주는 선거구에서는 아쉽게 1등에게 밀렸어도 의석을 가져가니 정당 득표율과 의석을 간의 비례성이 높아집니다.

정답 : 4

<12번 문항>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선거구 표풀이 문제입니다. 하나씩 들여다 보면서 차근차근 문제를 푸셔야 합니다.

선지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ㄱ. A당은 '남북으로만 통합하는 방식이 가장 유리하다' -> 남북으로만, 즉 가-라, 나-마, 다-바 로만 통합을 하게 되면, 두 석의 의석을 얻게 됩니다. 반면에 다른 조합으로는 어떠한 경우에서도 세 석의 의석을 얻을 수 없으니 (심지어는 의석을 손해보기까지 하니) A당에게는 남북으로만 통합하는 방식이 가장 유리합니다.

어려우신가요? 그러면 예시는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동-서 통합의 방식도 들여와서 가-나, 라-마, 다-바로 통합을 해보면, 오직 가-나 조합에서만 의석이 발생하고, 라-마, 다-바에서는 3등으로 의석이 전혀 발생하지 않기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ㄷ. C당이 현행 방식으로 얻을 수 있는 의석 수는 1석입니다. 오직 다 선거구에서만 한 석의 의석을 얻을 수 있는데, 가-나 또는 마-바 선거구를 통합한다면, 두 석의 의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잘 감이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때는 가-나에 동그라미를 먼저 쳐보십시오. 그러면 절대로 다 선거구가 바 선거구 이외의 선거구와 통합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됩니다. 그리고 그 조합에서는 다-바 선거구에서 한 석, 라-마 선거구에서 각각 의석을 한 석 씩을 얻을 수 있게 되어서 2석의 의석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마-바를 통합하면, 가 선거구는 무조건 라 선거구와, 나 선거구는 무조건 다 선거구와 묶일 수 밖에 없게 되어서 마-바 선거구와 나-다 선거구에서 각각 의석을 한 석 씩을 얻을 수 있게 되어서 똑같이 2석의 의석을 얻게 됩니다.

반면

ㄴ. B당이 가-나 선거구 통합을 전제로 했을 때 가장 유리한가? -> 가-나 선거구 통합은, 가-나, 라-마, 다-바로 통합을 의미하는데, 가-라, 나-마, 다-바 통합을 전제로 해도 똑같이 3석의 의석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가장 유리하다'라 말할 근거가 없습니다.

ㄹ. C당의 경우에는, 현행 선거 방식으로는 단 한 석의 의석밖에 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라-마 선거구 통합을

전제로 하면, 다-바 선거구와 라-마 선거구에서 두 석의 의석을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선지입니다.

정답 : 2

<13번 문항>

대통령 중심제와 의원 내각제의 차이를 묻는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했으나, 일부 의원 내각제적인 성격을 띠는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구분해서 암기하셔야 합니다. 문제에서는 전형적인 대통령 중심제의 특징을 묻고 있습니다.

- 1. 의회 의원이 각료를 겸직한다. -> 우리 나라에서 의회 의원이 각료를 겸직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대통령 중심제의 특징, 혹은 두 제도 공통의 특징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부분적으로 받아들인 의원 내각제의 특징이지, 절대로 전형적 대통령 중심제의 특징이 아닙니다.
- 2. 의회는 내각에 불신임권을 행사한다. -> 전형적인 의원 내각제의 특성입니다.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행정부와 입법부를 각각 국민의 손으로 꾸렸기에, 내각에 대한 불신임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3. 국민이 선거를 통해 의회를 구성한다. -> 이는 두 제도 공통의 특징입니다.
- 5. 행정부 수반의 의회 해산권 -> 이 역시 의원 내각제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전형적인 대통령제에서 이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2번에서 내각 불신임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 (행정부와 입법부를 국민들이 독립적으로 꾸림)와 같다고 보셔야 합니다.

반면

- 4.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이 동일인이다. -> 이것이 바로 대통령 중심제의 특성입니다.

정답 : 4

<14번 문항>

남북 통일에 관한 문제입니다. 본인이 통일에 관해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를 묻는 문제가 아니라, 교과서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통일을 바라보고 접근하는가를 묻는 문제이기에 제시문 분석에 가장 충실하셔야 합니다. 이런 문항들은 쉽게 맞출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주는 문제'인 경우가 많으니, 꼭 제시문을 정확히 읽으십시오.

- ㄱ. 위기 관리 비용 -> 통일에서 예상되는 사회 혼란등은 피할 수 없는 어떤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위기 관리는 혼란을 극소로 줄인다는 점에서의 의미를 갖습니다.
- ㄷ. 경제적 투자 비용 -> 모든 사회 간접자본, 그리고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교통, 통신망의 확충도 맞습니다.

ㄹ. 통일로 인한 편익 -> 분단 국가보다 통일 국가가 높은 위상을 갖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인구가 자연스레 늘게 되므로 내수 시장의 규모는 전보다 확대될 것입니다.

반면

ㄴ. 이질적인 제도의 통합이 개인의 모든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일원화' 시키는 것이 목표는 아닙니다.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일원화 시키는 것은 사회가 지향점으로 삼을 목표가 아닙니다.

정답 : 5

<15번 문항>

국제 정치학에 관한 문항입니다. 국제 정치는 전공자가 아닌 이상에, 심층적으로 역사적 사건들을 일일이 분석하면서 공부하기 보다는, 주요 사건과, 그 사건에 따른 국가들의 관점의 변화를 중심으로 공부하심이 맞습니다.

1. LN(League of Nations: 국제연맹)에서 UN(United Nations: 국제연합)으로 이행해가는 과정은 1945년에 이루어졌습니다. 반면 트루먼 독트린은 1947년에 발표되었으므로 선후관계가 옳지 않습니다.

2. 닉슨 독트린이 발표된 시기는 1969년입니다. 그리고 구 소련의 붕괴는 1991년입니다. 붕괴가 직접적으로 대립의 종식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마지막까지도 대립의 종식이 있었다고 보기 힘든 이상, 1969년에 미국과 소련 간 대립이 종식되었다는 진술은 시대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4. 9.11테러를 일으킨 주체는 국가가 아닙니다. 오사마 빈 라덴이 이끄는 테러조직 '알 카에다'의 만행으로 봄이 맞기에, 국가 간 국지전이라는 진술은 옳지 않습니다.

5. 1989년에 있었던 몰타 회담 이후의 세계의 질서는 미국의 헤게모니를 부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여러 강력한 행위 주체의 등장이라 보심이 맞습니다. 즉 이 때 적절한 표현은 '양극'이 아니라 '단극적 다극'입니다.

반면

3. 몰타 회담 이후의 세계 경제는 시장 경제 체제를 중심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 맞고, 공산진영은 사실상 붕괴되었기에 3번 선택지는 타당합니다.

정답 : 3

<16번 문항>

이 글의 제시문은, 선거 참여에 있어서 유권자들의 후보 선택 기준을 논하는 글입니다. 이런 글을 읽을 때는, 약간의 교과지식을 바탕으로 제시문에 나와있는 내용을 충실히 읽는, 이른바 '국어영역 비문학 독해' 스투운 읽기 방식이 필요합니다. 바로 문제 해설 들어가보겠습니다.

후보 선택 기준을 이 제시문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는 후보를 보고 투표하는, (ㄱ)에서 말하는 "인물 효과"에 관해 논하고 있고, 나머지 하나는 정당을 보고 투표하는, (ㄴ)에서 말하는 "정당 효과"에 관해 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시문에서는 명시적으로 (ㄱ)인물 효과에서 후보자 선택 기준을 후보 간의 자질 및 개인적 배경으로 설명하고, (ㄴ)정당 효과에서 후보자 선택 기준을 추구하는 정치적 가치와의 부합성 혹은 정치 사회화 과정에서 형성된 애착심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ㄱ. 유권자 다수가 정당 이념에 따른 투표를 한다면 (ㄱ)보다 (ㄴ)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 -> 옳은 설명입니다. 정당효과라는 말 그 자체, 교과서로 배웠던 내용에서 뿐만 아니라, 지문만 독해해봐도 제시문 마지막 줄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ㄴ. 후보자가 난립하여 개별 후보에 대한 정보 획득이 불가능할 경우 (ㄱ)보다 (ㄴ)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 -> 그렇습니다. (ㄱ)의 인물 효과에서 후보자 선택 기준은 후보 간의 자질 및 개인적 배경이라 했는데, 개별 후보에 대한 정보 획득이 어렵다면 아무래도 (ㄴ)의 정당 효과가 나타나기 쉽습니다.

ㄷ. 정당의 수명이 짧고 이합 집산이 심할수록 (ㄴ)보다 (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 -> 그렇습니다. (ㄴ)의 정당 효과가 나타나려면, 정당에 대한 애착심 내지는 정당이 내세우는 가치에 찬동해야 하는데, 이합 집산이 심하다면 이런 반응들을 이끌어내기 어려울 것입니다.

반면

ㄹ. 정당에 대해 정서적 일체감을 갖는 유권자가 많을 수록 (ㄴ)보다 (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 -> 정 반대로 서술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ㄴ)의 정당 효과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정답 : 4

<17번 문항>

다시 국제정치학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문제는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문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 발문입니다. 발문을 보시면 "다음 글의 주장과 부합하는~"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언뜻 보면 설명문으로 오해할 수 있는 글이, 자세히 보면 주장을 담은 글이라는 점에서 짚어볼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국제정치학에서는, 똑같은 현상을 바라보고서도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지면 180도 다른 주장이 나오게 되고, 그에 따라 정답이 되는 선택지도 전혀 달라진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문제 해설하기 전에,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잠깐 짚고 가겠습니다.

우선, 이상주의가 있습니다. 정치학자 '나이'가 대표적인 이상주의자이고요, 루소적 인간관을 취하고 사회를 바라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국제기구라든가, 혹시 있을지 모르는 위협에 공동으로 대비하는, 즉 집단 안보를 가능하게 하는 도구들에 찬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실현된 것의 (사실상의) 시초가 LN(국제 연맹)이라고 보시는게 맞죠.

반면, 현실주의가 있습니다. 홉스적 인간관을 바탕으로 사회를 바라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국제기구의 기능에 대해 대단히 회의적이며, 집단 안보는 존재하기 힘든 허황된 어떤것이라 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에 그

들은 평화가 유지되는 힘은 "세력 균형"이라 보았던 것이고, 세계대전 이후부터 소련의 붕괴 전까지의 양극적 행위주체간의 대립을 잘 설명해냅니다.

여하튼, 문제 해설로 들어가겠습니다.

제시문의 필자는 11번째 줄 ~ 13번째 줄에서 '지역 무역 협정은 역내에서 경제적 자유화의 효과를 공유하게 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지역 차원을 넘어서는 경제적 자유화에 대한 저항을 약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말을 통해, RTA(지역 무역 협정)가 흑자들의 의견(6 ~ 7번째 줄)과는 달리, 장기적으로는 세계화와 충돌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ㄱ. RTA는 세계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이 글의 논지가 그것이죠.

ㄴ. RTA는 역내 회원국에 배타적인 특혜를 부여한다. -> 두 번째 줄에 "회원국 간에는 관세 및 기타 무역 규제를 완화 내지 철폐" 라는 말을 통해 직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반면

ㄷ. WTO(Warsaw Treaty Organization 아닙니다.. 이 제시문에서는 World Trade Organization을 의미합니다)는 RTA 중심의 세계 무역 자유화를 지향한다. -> 7~9 번째 줄에 "지역 무역 협정은 WTO가 표방하는 무차별적인 최혜국 대우 원칙에 위반" 이라는 말을 통해서, WTO가 추구하는 방향과 일단 당장은 거리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ㄹ. RTA는 인접 국가들만의 정치적 및 경제적 통합을 목표로 한다. -> 정치적 통합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정답 : 1

<18번 문항>

이 제시문은 권력 분립의 원칙과, 분립된 권력들이 서로를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글입니다. 매번 '견제와 균형'은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관점이고, 이에 대해 잘 이해함과 동시에 예시들을 정확히 암기하셔야 합니다.

2. 대통령이 국회가 의결한 법안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음 -> 법률안 거부권은 행정부(대통령)가 입법부(국회)를 견제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견제가 맞습니다.

3.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 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 국정 감사, 국정 조사는 2번과 반대로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방법입니다.

4. 국회가 정해진 요건을 갖추어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 이도 3번과 마찬가지로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방법입니다.

5. 대법원은 특정한 경우에 명령, 규칙, 처분이 헌법 / 법률에 위반되는지 심사할 권한을 가짐 -> 명령, 규칙,

처분은 모두 행정부에서 만드는 것입니다. 즉 행정부의 권력 작용인데, 이를 사법부가 제한하고 있으니 사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방법입니다.

반면

1.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 견제 혹은 권력분립과는 무관한 내용입니다.

정답 : 1

<19번 문항>

제시문을 해설하기 전에, 간단하게 정치에 대한 인식과 참여 형태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정치에 대한 인식과 참여 형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로 향리형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정치 체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인식도 없다시피 하고, 참여도 없는 것이 그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과거 봉건 사회 중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 조선 중기 정도? 조선 후기를 넣지 않은 이유는 정조께서 실시하신 격쟁을 정치 참여형태로 볼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떤 형태인지 대략의 형상만 떠올리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신민형이 있습니다. 시민들의 정치 체계에 대한 인식은 분명히 존재하나, 참여할 수 없는 정치 체계죠. 그 예로는 프랑스 혁명 발발 직전의 프랑스를 떠올리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형이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그러합니다.

이 제시문에서의 국가들은 전부 형식적으로는 시민형 정치 참여를 띄고있습니다. 하지만, 갑국과 을국은 모두 외적인 강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참여를 꺼려하는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글의 주제는 3번 선택지, 시민들의 정치 의식과 참여 간의 불일치로 보심이 타당합니다.

정답 : 3

<20번 문항>

(가) ~ (라) 보기를 통해 우리나라 헌법 기관 중 어떤 기관의 권한을 명시했습니다. 헌법 기관 구성권, 국군 통수권, 긴급 명령 발표권, 국민 투표 부의권이 각각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헌법 기관은 "대통령"을 나타냅니다. (국회가 하나의 기관이고, 대법원이 하나의 기관이듯, 대통령도 하나의 기관이라고 접근하셔야 합니다. 구성원이 한 명인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ㄱ. (가)의 행사는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인사 청문회를 하고, 일부 인사들의 경우에는 국회에서 동의까지 해줘야 비로소 헌법 기관의 구성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제시문에서는 헌법 재판소장을 예로 들었기에, 맞는 말입니다.

ㄷ. (라)는 대의 기구를 거치지 않고 주권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다 -> 아주 멋진 표현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멋진 paraphrasing이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하나하나 쪼개놓고 분석해보겠습니다. '대의 기구'는 간접 민주주의에서의 국민들이 뽑아서 의견을 대신 표현하는 기관을 의미합니다. 국회가 가장 적절한 예시겠군요. 그리고 '주권자'라는 말은, 왕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닙니다. 이 문제의 발문은 '우리나라' 헌법 기관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헌법 제 1조 1항을 보시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그 말인 즉슨,

우리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권력의 근원은 국민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치자와 피치자가 동일하다는 말이고,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주권자'는 '국민'으로 해석하심이 타당합니다. 2012학년도 수능 정치 1번 문항 3번 선택지를 해설하면서, 20번 문항에서 다시 짚고 넘어가겠다는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이 바로 이 것입니다. 주권자가 국민이라는 말이 이 뜻입니다. 여하튼, 국민 투표는 직접민주주의적인 요소이며, 간접민주주의에서의 대의 기구를 거치지 않고 국민의 뜻을 묻는 것이니 맞는 보기입니다.

반면

ㄴ. (나)의 행사는 국무 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 국무 회의는 대통령이 내리는 거의 모든 결정마다 거쳐가야 하는 과정입니다. 대통령의 신중한 판단을 위해서 국무 회의는 필수적으로 거쳐가는 과정입니다.

ㄷ. (가) ~ (라) 모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에 해당한다 -> (나)의 국군 통수권을 제외한 나머지 권한, 즉 헌법 기관 구성권, 긴급 명령 발포권, 국민 투표 부의권은 전부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에 해당됩니다.

정답 : 2